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목 차

01

통일 이해

02

북한 이해

03

국제 정세

04

남북 관계

05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06

통일 미래상

1

통일 이해

통일의 필요성



여러분은 남북한이 합의하기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문제 성격



통일은 민족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문제

- 분단 극복과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 등 주도적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제
- 한반도 분단이 주변국의 개입 속에 진행되어, 통일문제는 ‘민족 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음



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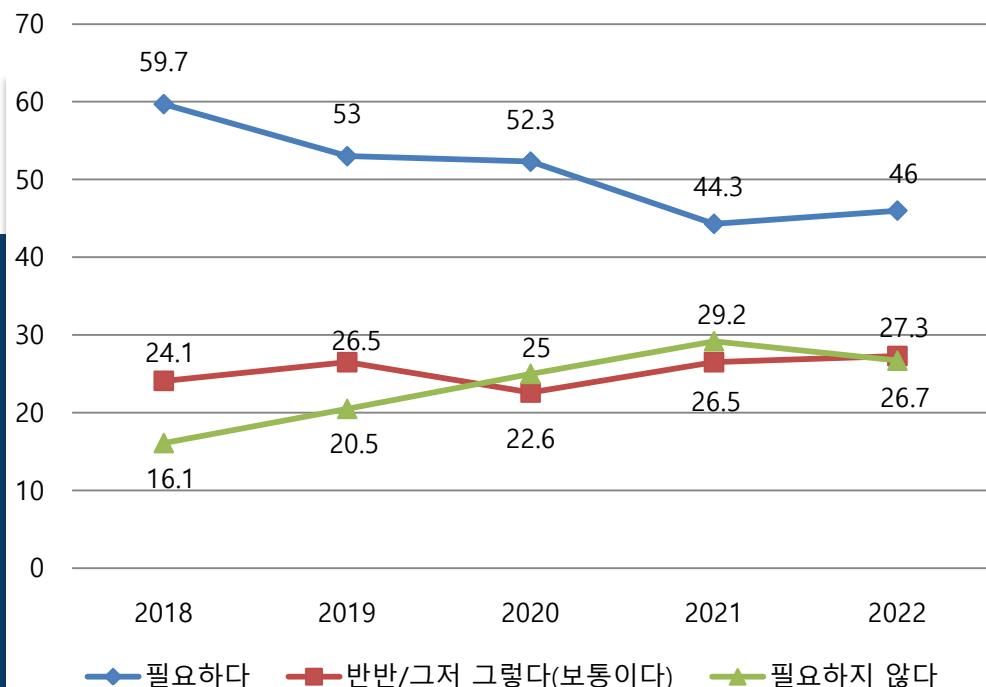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
-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과 평화 정착이 주변국의 이익과 부합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설득

통일의식조사 결과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북한의 군사 도발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감소 등 영향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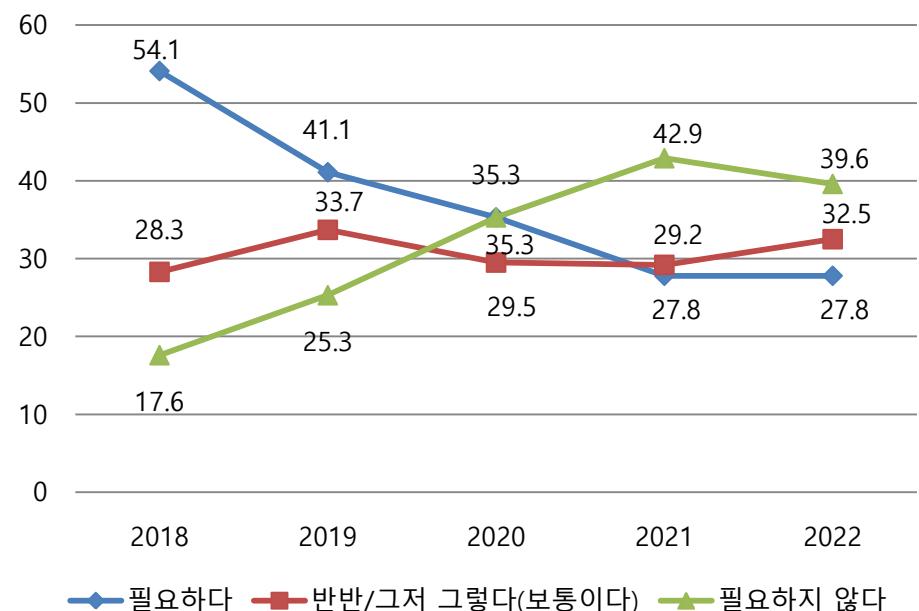
(단위: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8~2022)(19~29세)

(단위: %)



◎ 자료 출처: 김범수 외(2022).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 31을 참고하여 재구성

통일이 필요한 이유

- 같은 민족(42.3%) > 전쟁 위협을 피하기 위해(31.6%)
 >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 이산가족 문제 해결(10.6%) 순 응답

통일의 가장 큰 이유(2018~2022)

(단위 : %)

연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없다/모름/ 무응답
2018	44.5	6.7	31.6	3.5	13.5	0.2
2019	34.6	10.6	32.6	3.0	18.9	0.3
2020	37.3	7.4	37.9	1.9	15.3	0.3
2021	45.7	11.3	28.1	3.5	11.4	0.1
2022	42.3	10.6	31.6	4.7	10.6	0.3

© 자료 출처: 김범수 외(2022).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 38을 참고하여 재구성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34.1%) > 남북 간 정치체제 차이(21.5%) >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0.3%) 순 응답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2018~2022)

(단위 :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2020	2021	2022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21.3	21.5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16.3	20.1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32.1	34.1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26.7	20.3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2.6	3.3	4.0
기타	0.2	0.2	0.3	0.1	0.0
무응답	0.5	0.3	0.3	0.4	0.1

◎ 자료 출처: 김범수 외(2022).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p. 40-41을 참고하여 재구성.

개인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 확대



국가와 사회, 민족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2

북한 이해

북한의 이중적 성격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해야 하는 존재



핵과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

-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상대임을 인식
 -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
- ✓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 ☞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과 사회 현상의 근본적 요인 파악
- ✓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이해
 - ☞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되는 북한의 실상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

북한의 정치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이 통치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



- 북한은 역대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견지,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제시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정치체제인 ‘1당 독재체제’ 이면서, 당-군-국가체계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통치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
-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조직과 기구, 인민들이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구조이며, 유일지배 이념을 통해 1인 통치 정당화

북한의 군사

북한군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있고, 비대칭전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



6차 핵실험(2017)



ICBM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
- 2022년 9월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

북한의 경제

북한은 제도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 경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경제구조**



- 제도상으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한 계획경제체제이며, 배급제도를 운영
- * 대규모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단체가 집단적으로 소유

-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실상 배급제가 중단, 2003년 상설종합 시장화 조치를 통해 계획경제하에 시장 운영 공식화

-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시도
-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북한의 사회 · 문화

돈주(신흥부유층)는 누구

인원수	5만~10만달러 이상 보유 자산가 24만명 추정
출신성분 및 직업	재일교포, 화교, 외화벌이 일꾼, 밀수꾼, 탈북자 가족, 장마당 장사꾼, 당 간부 부인 등
주된 사업	개인 대부업, 주택 건설, 무역회사, 석탄기지 사업화 등

*자료: 국가정보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래픽: 유정수 디자인기자



MTD 미니투데이

-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이 변화하며 북한사회 계층, 계급구조에도 변화를 초래
 -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돈주'가 등장

-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
- 최근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등 청년 대상 정치 사상교양 강화



예술기동선전대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 문화예술을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개인적 문화 욕구나 다양성보다는 집단주의적 성격

북한인권 의제의 중요성

-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

- 북한은 1981년 유엔의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 헌법적 가치에 따라 통일 이후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중요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



UNITED NATIONS

세계인권선언 채택(194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0 December 1948
Source: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 법적 보호 없이 주민을 처형·체포·감금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위협

- 특히, 정치범죄 연루자에 대한 고문·폭력, 정치범수용소 내 영양·위생·의료 문제 등 인권 침해 자행

사상·종교·표현의 자유

○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 의사표현, 종교활동, 집회 및 결사 등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처벌

- 당국의 사상적·법적 통제로 북한 주민들은 관련 권리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부재

이동 및 거주권

○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여행 불가능, 탈북자에 대한 학대·고문·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발생

- 강제이주 및 국경통제 강화, 외부 정보 차단을 위해 국외 이동 및 거주에 대해 철저한 단속 실시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식량권

- 북한의 식량 수급 정책 실패로 인해 배급 부족 및 계층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존재
 - 국제사회 지원 거부, 생산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수취 등 주민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위험 직면

건강권

-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우며 결핵 등 감염병 대응 미흡
 - 계급별 의료서비스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 및 불법 의료행위 등 성행

노동권

-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 국가가 배정한 직업으로 생활
 -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부족한 보수로 정상적 생계유지에 어려움 직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



Seventy-seventh session
Agenda item 65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5 December 2022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A/77/463/Add.3 para. 29)]

77/226.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at all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 the obligations t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Recalling all previous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ssembly
resolution 76/177 of 16 December 2021 and Council resolution 49/22 of 1 April
2022, and the need to continue to exert pressure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ordinate efforts aimed at achiev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esolutions,

Deeply concerned at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the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iterating the importance of following up on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iterating also its grave concern at the detailed findings
contained therein,

Recall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its population from crime against humanity and recalling also that the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200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2014)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2022)

-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03년 이후 매년 채택
- 유엔 차원에서 인터뷰,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 진행
-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국정 과제로 추진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제사회 와의 협력 강화

3

국제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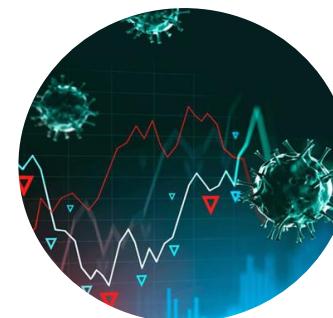
국제 정세



1990년 소련과 동구공산권이 붕괴하면서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대폭 증대

지리적 공간 전략에 기반한
지정학적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경향이 강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국제 질서의 패권경쟁 심화



이와 같은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

동북아 정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 · 안보 지형이 변화**

동북아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산재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심화**



미중 경쟁으로 인한
경제 안보지형 변화



동북아지역 내
군사적 긴장 심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4

남북 관계

남북관계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1991년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한
'남북한기본합의서'에서부터 규정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남북관계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 협력과 대화를 반복



연평도 포격 사건(2010)



이산가족 상봉(2000년 이후 21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개성공단 운영(200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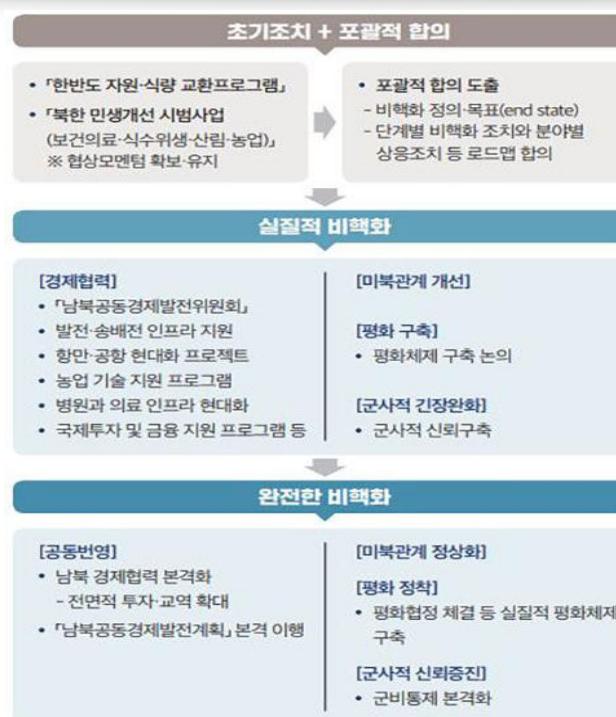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5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

→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실현

3가지 추진원칙 & 5가지 중점추진과제

3가지 추진 원칙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5가지 중점추진과제

비핵화와 남북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과 분단 고통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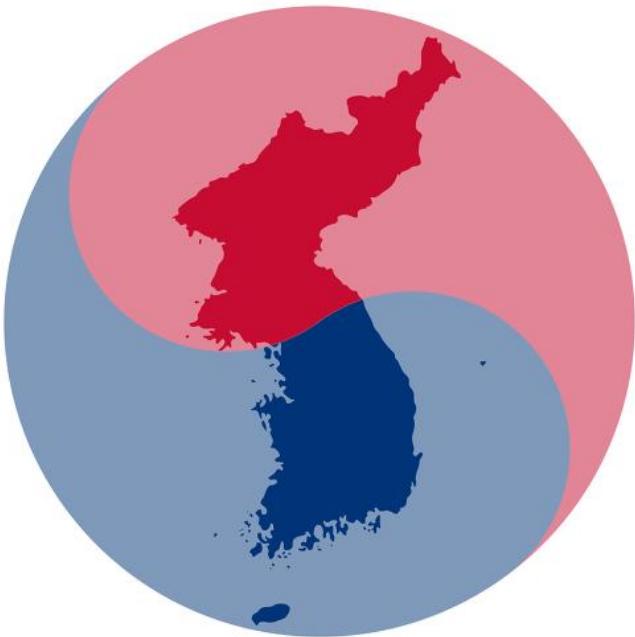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 ·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

6

통일 미래상

통일 미래상



- 통일한국은 무엇보다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분단비용 해소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통일한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일한국은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통일은 한반도에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THANK YOU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